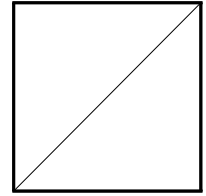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22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6. 24. (제 12 차)	

(주)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6. 24.

1. 의결주문

(주)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9.5.20.~2019.5.28. 기간 중 (주)하나은행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건에 대하여 ‘감봉 3월’~‘주의’ 조치요구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련법규 : <붙임 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5조의2(행정처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예),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별표3>(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위원장에 대한 위임), [별표]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금융감독원 제8차 제재심의위원회(2020.4.23.) 심의필

<별지>

(주)하나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직원에 대한 조치 : 감봉3월 ~ 주의

조치대상자	지적사항	조치내용	
		신분제재	금전제재
⓪⓪⓪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감봉(3월)	과태료부과**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견책	과태료부과**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주의*	-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주의	-

* 2011.10.13.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과 관련하여 ▲▲▲▲▲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으로 1단계 감경

**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장에 대한 위임사항으로 금융위원회 은행과에서 2019.11.27.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고, 자진납부를 완료하였음(「금융위원회운영규칙」 <별표 : 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 중 제29(금융실명제 관련사항)의 ‘자’목)

○ 조치사유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의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2. 조치사유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대리인(거래요청자)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 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① 前 ☒☒☒☒지점(現 △△△지점) 대리 ○○○은

2014.12.31. ○○○ 및 ⊕⊕⊕ 명의의 예금계좌 4건(110백만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동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② 前 ☒☒☒☒지점(現 □□□□□□부) 팀장 ●●●는

2014.12.31. ○○○ 및 ⊕⊕⊕ 명의의 예금계좌 4건(110백만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 ○○○이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자로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계좌 개설을 승인하였음

③ 前 ☒☒☒☒지점(現 ㉿㉿㉿㉿㉿센터) 대리 ●●●는

2015.3.23. ○○○ 명의의 예금계좌 1건(0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동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④ 前 □□□□지점(現 ◇◇◇지점) 차장 ○○○은

2015.3.23. ○○○ 명의의 예금계좌 1건(0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 ●●●가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자로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계좌 개설을 승인하였음

※ 금융실명법 제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원회에 통보(2019.11.8.)

< 관련법규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의2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붙임1)

관 계 법 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행정처분) ①~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생략)

2. 직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나. (생략)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④ (생략)

[본조신설 2014.5.28.]

부 칙 <법률 제12711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과태료) ①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단서 생략)

2.~5. (생략)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다. (생략)

2.~5. (생략)

②~③ (생략)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④ (생략)

-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③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9조(금융기관·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등)**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금융업관련법상 벌칙,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와 동시에 감독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으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 ② 감독원장은 기관경고를 받는 금융기관의 관련임원에 대하여 당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관련정도에 따라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거나 경고조치를 함께 할 수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2. (생략)
3. 감봉
-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나.~라. (생략)
-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③ (생략)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I. 공통부문

I -1.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1. 관련자의 구분

금융실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행위자 :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 ② 감독자 : 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 ③ 보조자 :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2.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 ① 법 제3조 위반행위(금융실명거래 위반)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을

말한다)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책임정도*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유형①	5천만원 이하	견책	주의 이하	주의 이하
	3억원 이하	감봉 이상	감봉 이하	감봉 이하
	3억원 초과	정직 이상		
유형②		주의 이하	-	-

* 유형① : 차명거래, 고객 동의 없는 임의계좌 개설 등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

유형② : 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로서 단순절차 위반(단순절차 위반행위 사항을 시정하는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현지조치 포함) 가능)

5. 가중 및 감경

가. 법 제3조 위반행위 관련 계좌수가 5계좌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나.~마. (생략)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위원장에 대한 위임)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중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29. 금융실명제 관련사항

자.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

(붙임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주)하나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6.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직원	○ 직원(1명) : 감봉 3월, 과태료 부과 ○ 직원(1명) : 견책, 과태료 부과 ○ 직원(2명) : 주의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대리인(거래요청자)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 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1) □□□□지점에서는

2014.12.31.~2015.3.23. 기간 중 ○○○○ 및 ⊕⊕⊕ 명의의 예금
계좌 5건(110백만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동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
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2) ◆◆◆부 등 2개 지점에서는

2009.9.24.~2013.12.31. 기간 중 ○○○○ 및 ⊕⊕⊕ 명의의 예금
등 계좌 27건*(1,239백만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동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 예금 : 15건, 특정금전신탁 : 6건, 집합투자증권 : 6건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
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3) □□□지점에서는

2012.10.5.~2013.5.20. 기간 중 ●●●●●● 명의의 예금계좌 2건
(0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동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내점할 수 없었는데도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4) □□□□□지점(舊 □□□지점)에서는

2009.12.30.~2010.12.31. 기간 중 ⊕⊕⊕ 명의의 예금계좌 4건 (120백만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인(◎◎◎, 남편)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시받아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의2, 제7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제13조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5.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일반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76	02-3145-7062